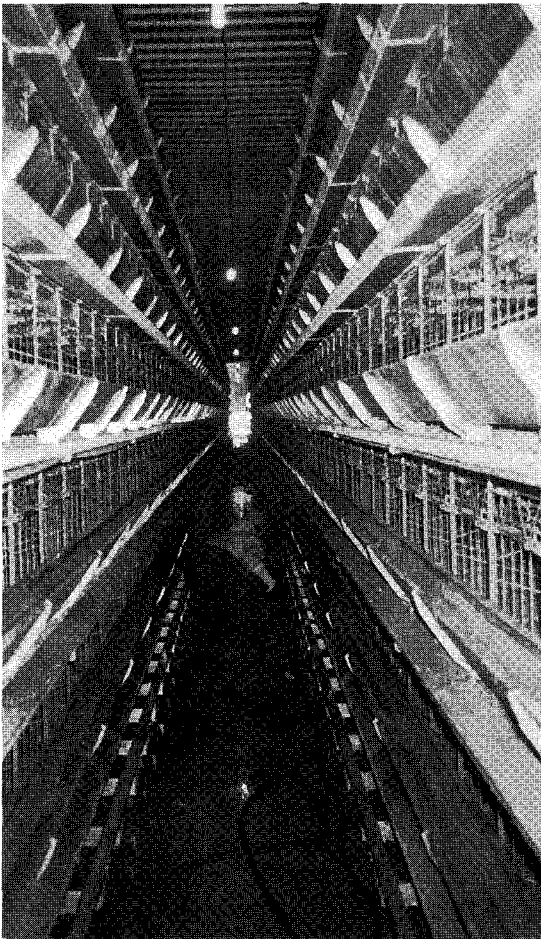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대 돌입

2005년부터 농업분야 전 사업장으로 확대

◇ 취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양계산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0년대 초부터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해 규모가 커져왔으며,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근로자들의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은 항상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전 불감증 속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재해사고와 이로 인한 피해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양계업을 포함한 농업분야는 산재와 관련하여 소의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구축이 빈약한 실정이고 산재보호대상이 전 농업분야로 확대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범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농업분야는 국내 전체산업에 비해 약 1.3배 높은 재해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2년도 경북 소방본부 집계에서도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농업관련 사고로 675명이 부상하고 21명이 사망할 정도로 양계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1년에 평균적으로 2,600~2,800여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7~8명의 근로자들이 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2년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002,263개소로 10,571,279명이 대상자

인데 이중 재해자수가 81,911명으로 이중 2,605명(2.46%)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분야에도 320명이 재해사고를 당해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표1).

금년의 경우 10월 30일 현재 총 78,650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2,4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12월까지 평년 수준의 수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표2).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의 경우 재해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계 파업 등 사회적인 불안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표1. 2002년도 농업분야의 재해발생 현황

업종별	사업장수(비율)	근로자수(비율)	재해자수(사망자수)	재해율
전체산업	1,002,263	10,571,279	81,911(2,605)	0.77%
농업	2,113(0.20%)	31,094(0.29%)	320(10)(0.39%)	1.03%
임업	4,204(0.41%)	94,489(0.89%)	706(19)(0.86%)	0.75%
어업	371(0.03%)	1,864(0.01)	199(25)(0.24%)	10.67%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표2. 산업별 산업 재해현황

구분	2003. 10		전년동기		증감율(%)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총계	78,650	2,410	66,261	2,112	18.7	14.1
광업	1,415	392	1,034	324	36.8	20.9
제조업	33,313	594	28,299	531	17.7	11.9
전기·가스·수도업	112	12	114	16	-1.7	-25
건설업	18,672	618	15,881	518	17.6	19.3
운수·창고통신업	4,818	175	4,072	164	18.3	6.7
기타산업	20,320	619	16,861	559	20.5	10.7
임업	636	17	541	17	17.6	0
어업	133	18	156	23	-14.7	-21.7
농업	301	10	252	10	19.4	0
금융보험	517	36	492	42	5.1	-14.3
기타	18,733	538	15,420	467	21.5	15.2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1. 양계장의 산업재해 현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중 농업분야는 전사업에 비해 겨우 0.2%에 해당되는 등 매우 취약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양계업은 더욱 열악하다. 가입자들중 대부분은 5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영농조합법인이나 규모가 큰 농장들이며,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농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수를 줄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를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산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 K지역의 경우 한 두명의 직원을 둔 소규모 농장이라 하더라도 전 농가중 80% 이상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곳도 있다.

양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고를 분류해보면 계분·집란·사료(체인) 벨트에 의한 흡착, 절단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누전 등에 의한 화재사고,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금년에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 농장관리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기계작동 상태에서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2002년도 발생한 중대 재해자 1,035명(사망 916명, 부상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분야가 589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73명(26.4%), 운수통신업 45명(4.3%) 순으로 각각 나타났는데, 그중 양계장을 포함한 안전분야에서의 사고 형태를 보면 협착·감김 사고가 98명(2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락 88명(19.6%), 화재 등 특정사고가 53명(11.8%), 충돌·접촉이 46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부분의 사고가 설비·기계(197명(43.9%))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상당수의 사고가 안전장치 방호시설의 결함과, 불안정한 작업 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계화에 따른 자동화시스템이 상당부분 보급된 양계분야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해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2. 2005년부터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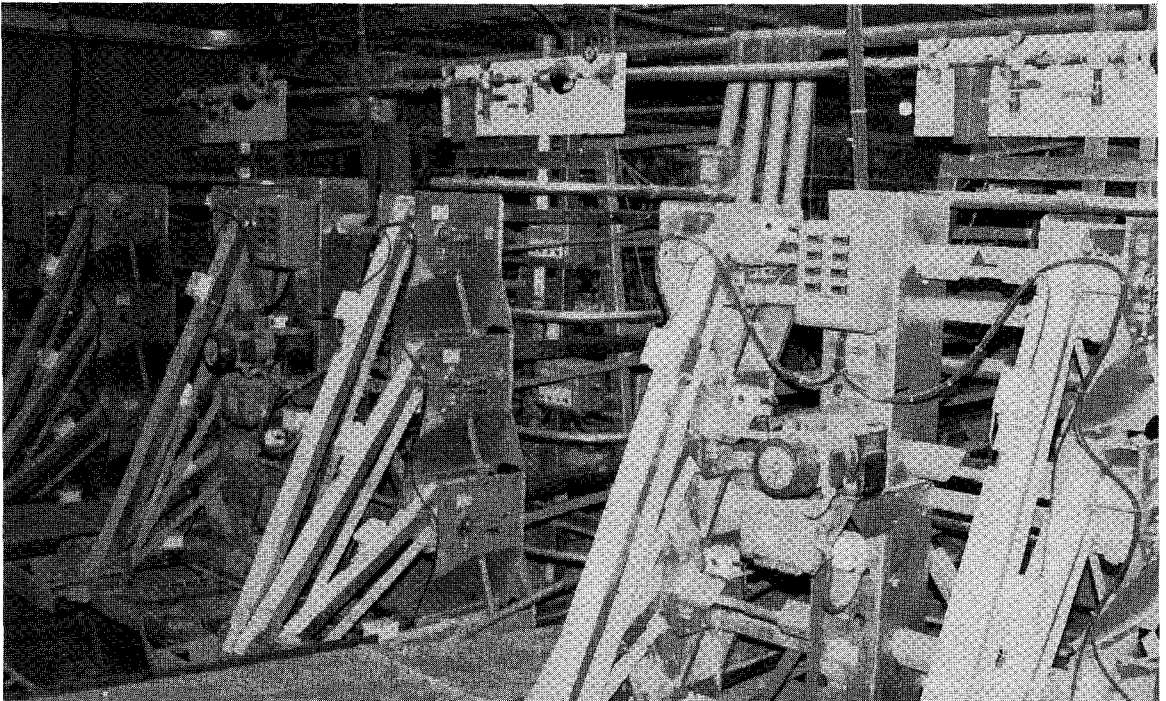
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후 1995년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농업에서의 산재보험은 1990년대 이전에는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1991년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임업, 어업, 수협업에 대한 산업재해 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는 농업, 임업, 어업, 수협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2003년 5월 7일부터는 국무총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농업분야 등 5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법인 사업장도 산재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오는 2005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 보호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2005년부터는 자영업을 하는 농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1명 이상 보유한 농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농장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법인체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취업중에 입은 재해도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가입대상이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농장주에게는 일정 불이익이 있는데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은 하였으나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양계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14/1,000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만약 5만수의 농장을 부부 1팀의 인부를 두어 농장을 운영하고 월 16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보험료는 연간 26만원정도를 내야 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이 성립된다.

3.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모든 산재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재보상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농업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농협의 안전공제를 통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재처리를 하고있지만 그 규모와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안전에 대한 연구 및 예방활동도 예산부족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농업 안전에 대한 업무는 농촌진흥청 내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http://farmwork,rlsi.go.kr>) 작업안전지원팀에서 맡고 있는데, 최근에는 양계장 작업시 유해요인 제거를 위한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양계분야에도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으로 보상문제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농업분야의 안전

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자들의 조직망을 통해 예방활동을 벌이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해가면서 활동을 넓혀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농촌생활연구소 작업안전지원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 법조항에는 농민이 산재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에서도 농업의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탄생된 출연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987년 산업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농업의 안전사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1999년 농·임업분야 안전보건 관리 기반조성 계획으로 제1차 산업재해 예방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이후 농업분야의 산재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농약의 안전사용과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등 농업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도 병행 실시해오고 있다.

공단이 처음 신설될 당시 산업재해율이 2.8%(100명당 재해율)에 해당되었으나 지난 2002년에는 0.77%로 낮아지는 성과를 가져

오고 있다. 현재는 농·임·어업 분야에도 금년부터 100개 사업장(농장)을 선정하여 재해 예방 기술지원과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등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4. 맺음말

1인 사망재해로 인한 사업손실액은 2억원이라고 한다. 결국 안전을 무시한 사고는 오히려 농업의 경영안정을 해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오는 2005년부터는 직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 모든 양계장도 의무 가입대상으로 바뀌게 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장주는 안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은폐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농가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보험료납부에 관해서도 요율을 낮추든지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관련 업계에서는 농업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원규모와 활동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업계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나갈때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양계분야의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 **양계**